

“광양 도심에 방치 ‘서울대 육묘장’…소유권 시민에 넘겨야”

전남도의회, 광양 구도심 도시개발 계획 방해…정부에 양여 촉구

광양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서울대 육묘장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서울대가 수십년간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도시 발전 저해 측면 등을 고려할때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형석(민주·광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에 위치한 ‘서울대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양시 광양을 칠성리 419-2 일원의 서울대 증식원은 5002㎡ 규모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부지를 위탁받아 사용 중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이던 시절 서울대 소유였지만, 서울대가 지난 2011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서울대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가 해당 부지를 정부로부터 양여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섰다.

서울대 증식원은 광양 구도심의 노른자 땅으로 통하는 광양역과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기반 시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당장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시와 함께 ‘수확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할때도 후보지로 올랐으나, 서울대에서 부지 제공을 거절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다른 곳이 낙점됐다. 당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양시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부지를 활용

할 수 없는 탓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가 해당 부지를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가 아닌 지자체가 양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형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979년부터 올해까지 증식원 부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1948년 국가 귀속 이후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증식원을 서울대에 양여하려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증식원의 양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는 “서울대 증식원이 관리 목적과 현 상태에 비추어 더 이상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증식원 소유권자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재 행정재산인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양여 혹은 매각이 가능한 상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증식원을 특수법인인 서울대에 양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를 용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회, 서울대학교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각화동 농산물 시장 이전 부지 ‘북구 10km 이내’

광주시, 내년 5월 농식품부 시설현대화 공모 신청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는 북구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10km 이내로 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연내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 5월 농식품부 시설현대화 공모에 신청한다(광주일보 9월 18일자 1면)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5일 북구 각화동에서 열린 ‘시설 현대화 설명회’에서 “북구 내 10km 이내를 원칙으로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며 “부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토지비를 줄여 사업 타당성을 높여 한다”며 “이전은 중장기 과제이되, 현장의 불편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빠른 이전을 요구했다.

중도매인·법인 대표들은 “계획대로면 2036년 준공인데 10년은 너무 멀다”며 “6~7년으로 앞당기고, 단계별 공사나 재정·민자 병행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차난과 여름 폭염, 노후 냉장시설, 악취·교통 혼잡 등 즉시 과제를 지적하며 “이번 달·이번 분기에 무엇을 바꿀지부터 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용과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2304억원 수준으로 제시됐고, 국비 30%·융자 40% 구조가 안내됐다.

기존 부지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는 “매각 수입이 발생하면 국비가 감액되는 최신 기준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토지비는 초기 1000억 원대 후보지에서 300억원대 대안지를 발굴했다는 점이 공유되며 “부지비 절감이 곧 사업 타당성”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시설 배치와 규모를 둘러싼 질의도 잇따랐다. 과일동이 채소동보다 작게 설계된 데 대해 “당 처리면적 원단위와 현재 물량을 반영한 결과”라는 답변이 나왔다.

상가동 입주와 주변 상권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신시장 내 상가동을 설치해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라 입주 기회를 제공하되, 기존 상권 보호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화물터미널 처리에 대한 주민 우려에는 “사유지 특성·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원론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개선 TF를 이미 꾸려 주차 혼잡 완화, 악취 저감, 냉장·냉방 설비 보강, 통행 동선 정비, 수납료·임대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현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계획도 나왔다. 올해 12월 후보지 확정, 내년 5월 공모 신청, 선정 시 예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를 거쳐 2030년부터 설계·보상·착공에 들어가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 속도 낸다

전남도, 한전KDN과 업무협약

전남지역 공공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나주시와 영광·영암군,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 중립 및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김영록 전남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우승희 영광군수, 장세일 영광군수와 박상형 한전KDN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서 지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와 나주시, 영광·영암군 등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유휴부지를 발굴해 발전사업에 제공하는 한편, 발전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전KDN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ICT 솔루션 구축 등 사업화를 추진한다. SPC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이번 사업이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확산 및 개발 이익 공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장 신안군은 햇빛연금 외에도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해 주민에게 나누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AICON 광주 2025’ 개막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 개막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G-패스 시행 효과 ‘톡톡’…이용객 늘고 교통비 부담 줄었다

1~8월 이용 8104만건 1.8% ↑

광주의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광주G-패스’가 시행 8개월 만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부담은 줄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15일광주시에 따르면 1~8월 교통카드 기반 이용 건수는 810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44만여 건(1.8%) 늘었고, 월평균 1013만여 건을 기록

했다.

같은 기간 월 1회 이상 이용 시민은 720만 804명으로 2.4%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776억 4892만원으로 0.9% 늘었다.

5월 무료 운행, 6월 파업을 제외하면 이용자 2.8%, 이용건수 2.5%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교통복지 측면의 체감도 높아졌다.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에 더해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을 받는다.

K-패스 가입은 4만 5749명에서 11만 4470명으로 2.5배 늘었다.

시는 버스 노선 개편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정시성과 환승 편의가 높아지면 ‘15회 이상’ 문턱을 넘는 시민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통복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선 개편과 2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향동요회